

한국 공론장의 갈등구조

근대 신문의 생성과정을 중심으로

손석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근대 공론장과 신문의 형성과정에 대해 '학문연계적 연구'를 시도했다. 근대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론장은, 중세 유럽의 신분제적 정치체제를 허물고 시민사회를 등장시킨 조건이었다. 유럽에서 근대 신문은 아래로부터 여론을 모아가면서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 구실을 했다. 한국에서도 18세기 이후 조선 시대 내부에서 아래로부터 문예적 공론장과 정치적 공론장이 발전해나가고 있었다. 농업에서 생산력 발전에 따른 신분제 질서의 동요와 부의 축적에 따른 상업과 수공업, 광업의 활성화는 그에 걸맞은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신문이라는 인쇄미디어를 만들기 전에 개항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의 근대 신문은 공론장과 갈등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근대언론의 생성문제를 두고 언론학계에서 논의해 온 이식론(移植論)이나 접목잡종론(接木雜種論)과 달리, 이 논문에서 제안한 '갈등구조론'을 통해 우리는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연유하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키워드: 공론장, 시민사회, 이식론, 접목잡종론, 발생적 구조주의.

1. 문제 제기

근대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카페나 선술집으로 시작해 '문예'를 거쳐 신문과 정당, 의회로 전개된 공론장(public sphere)¹⁾은, 중세 유럽의 신분제

* songil@hani.co.kr

1) 하버마스의 공론장(Öffentlichkeit)은 '공공영역', '공론의 장', '공중장'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왔지만 여기서는 공론장으로 옮겼다. 이미 학계와 언론계에서 공론

적 정치체제를 허물고 시민사회를 등장시킨 조건이었다. 위르겐 하버마스가 창안한 공론장 개념은 그 뒤 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가의 물음과 맞물려 역사학과 사회학계 그리고 언론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하버마스(1962/2001, 293쪽)가 신문을 “공론장의 가장 탁월한 제도”로 평가했듯이, 언론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시민 공개장이면서 공개장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거나 생성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제도”(방정배, 1995, 230쪽)라는 점에서 다른 공론장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그 언론이 한국사회에서 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왔다는 데 있다. ‘시민사회의 확실한 제도’이자 핵심적 공론장인 언론이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상업화하거나 사유화되고 있는 현실은 사회과학의 실천적 관심을 요구한다.

언론의 상업화·사유화(이재경, 2004)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독과점한 언론사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몇몇 ‘언론인들’에게 개인적 권력을 보장해줄 수 있지만, 한국의 공론장이나 한국 민주주의의 내일을 생각하면,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 대다수가 공동의 정치현실에 참여하는 것이 미디어의 정치보도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현대사회의 공론장은 그 자체가 ‘미디어 공론장’(윤영태, 2004)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는 특정 신문사나 방송사의 위기를 넘어 공론장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실제로 그 위기는 구체적 삶의 현실에서 갈등과 분열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공론장, 또는 ‘미디어 공론장’의 역사적 뿌리를 찾아가 생성과정을 탐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론장의 위기가 한국 저널리즘이 풀어야 할 오랜 숙제라면, 적어도

장이란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거니와 ‘Öffentlichkeit’가 제도적으로 고착된 특정 영역으로 한정되기보다는 ‘사적 개인으로서의 공공이 논의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마당’이라는 의미에서 장(場)의 개념과, ‘토론하고 논의한다’는 개념으로서 론(論)이 들어 있는 공론장의 용어가 적합하다는 한승완의 주장이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위르겐 하버마스, 1962, 한승완 옮김, 2001, 서문).

그 문제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성찰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한국사회에서 공론장의 생성과정을 탐색하는 연구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주제이다. 근대 시민사회의 핵심인 공론장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이거니와, 공론장의 핵심인 미디어만 분석하더라도 한국의 언론사를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

1960년대 초에 ‘공론장’ 개념을 창안한 하버마스(1962, 57쪽)는 공론장 연구가 “연구대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특정한 연구방법이 요구된다”면서 그것을 “사회학적인 동시에 역사적 방법”으로 설명했다. 하버마스(1962, 15쪽)는 “18세기와 19세기의 영국, 프랑스, 독일의 발전으로부터 부르주아 공론장의 이념형을 전개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았다”면서 “시대에 고유한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는 일에는 매우 복잡한 사회현실로부터 중요한 특징들을 추상화하여 강조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공론장을 탐색하는 데도 하버마스가 선택한 ‘사회학적인 동시에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유럽의 경험에서 하버마스(1962, 58쪽)가 ‘역사적 범주’로 추출한 ‘공론장의 이념형’이 한국에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매우 복잡한 사회현실’로부터 ‘중요한 특성’들을 ‘추상화하여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복잡한 현실에서 중요한 특성들을 추상화하기 위해서는 하버마스가 유럽의 공론장 연구에서 시도했듯이 사회과학과 역사학 그리고 문학사의 성과들을 아우르는 ‘학제적 연구방법’이 적실하다.

현대 학문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기된 학문연계적(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는 “학문 분야 사이를 엮물리게 하는 연구”로서 “상호 교환을 통해서 지식의 분야를 다시 조직”하는 “구성적 재결합”을 목적으로 한다(Jean Piaget, 1973/1980, 158쪽).

물론, 학제적 연구방법은 사회과학이나 역사학 양쪽에서 두루 비판받을 수 있다. 역사를 연구하는 쪽에서는 1차 문헌에 대한 섭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사회과학 쪽에서는 주관적 해석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학제적 연구방법은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지적처럼 여러 연구영역의 튼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영역이 소홀하기 쉬운 ‘구성적인 재결합’을 가능하게 해준다. 더구나 시나브로 분화하는 학문의 각 영역에서 새로운 지식이 ‘개척’되어가는 상황은 여러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수평적으로 펴놓고 그 주제들을 모두 꿰뚫어 엮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학제적 연구는 ‘모체’가 되었던 과학에도 영향을 주고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Jean Piaget, 159쪽). 본 논문이 한국에서 공론장의 형성을 연구하면서 역사학과 사회학 그리고 국문학의 연구성과들을 종합해 새로운 ‘구성적 재결합’을 시도해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과학계와 철학계에선 시민사회론이나 하버마스 사상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지만, 공론장이 한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이는 하버마스 자신이 공론장을 제기하면서 ‘사회학적인 동시에 역사적 연구방법’을 강조한 것에 비추어볼 때 아쉬운 대목이다.

본 논문이 학제적 연구방법으로 탐구한 문제는 ‘한국에서 공론장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근대신문의 위상은 무엇이었는가’이다. 장 피아제가 학제적 연구에서 ‘구성적 재결합’의 방법으로 강조했듯이, 이 논문에서도 발생적 구조주의(genetic structuralism)에 입각하여 구조의 전체성(wholeness)을 파악하려고 시도했다(Jean Piaget, 3~4쪽). 구조적 전체성은 고정화한 전체가 아니라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와 전개된 과정을 중시한다.

하버마스가 유럽의 공론장을 연구하면서 주목한 것은 중세 지배체제를 부정하는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었다. 봉건사회 내부에서 새롭게 형성된 시민계급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는 과정에 카페와 선술집에 이은 문예 공론장에서 신문이라는 “탁월한 공론장”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론장 생성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도 조선 후기사회에서 유럽과

견줄 만한 공론장 형성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점에서 역사학과 사회경제학계에서 꾸준히 심도있는 연구를 축적해온 조선 후기의 ‘자본주의 맹아(萌芽)론’을 언론학계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맹아론은 종래의 실증적인 문헌고증사학(文獻考證史學)과 식민사학의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한국 역사의 주체적이고 발전적 성격을 부각했다. 고대사 분야에서 구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확인한 것도 큰 성과이지만,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계가 최대 성과로 꼽는 것은 무엇보다 자본주의 맹아론이다(구선희, 1994, 243쪽).

자본주의 맹아론은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나아가 발전적인 한국사 인식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후 ‘내재적(內在的)발전론’으로 정착하면서 한국사 연구방법론으로 자리잡아갔다. 조선후기의 내재적 발전론으로 한국사 연구의 새 지평을 연 김용섭(1970/2004)은 논에서의 이앙법과 밭에서의 견종법으로 생산력 증가를 가져오고 상업적 농업이 이루어지면서 종래의 지주와는 다른 ‘경영형 부농’의 등장을 개념화했다.

김용섭의 독보적 농업사 연구에 이어 송찬식의 광작운동(廣作運動)과 정창렬의 둔전 연구가 성과를 거두면서 내재적 발전론이 뿌리를 내리고 정체성론을 극복할 수 있었다. 동시에 상업과 광공업 분야에서도 자본주의 맹아를 찾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강만길의 시전상인(市廛商人)·경강상인(京江商人)·송상(松商)의 자본축적을 다룬 연구가 그것이다. 이어 상업자본·공인의 수공업·광업지배와 이들 영역에서 임노동자의 분업적 협업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경영형태 그리고 무역사에 대한 연구들(강만길, 2000)이 쏟아졌다.

여기서 과연 공론장의 영역에서도 그와 견줄 만한 ‘맹아’는 없었을까라는 문제의식 아래 조선시대 공론정치와 후기 상황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상공업에서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했다면, 그에 따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서구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상업의 발전으로 근대 미디어인 신문이 등장할 수 있었다. 상업의 발달은 인간의 상호작용 영역과 기회를 확대시켜 중세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

문이다.

거꾸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상업도 발달할 수 있고, 이는 서구의 자본주의 전개과정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상공업의 발달은 커뮤니케이션의 발전단계를 높일 수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성숙해갔다는 것을 의미(채백, 2003, 14쪽)한다.

이와 관련해 1990년대 이후 역사학계나 국문학계에서 조선후기에 밑으로부터의 여론형성과 관련된 연구에 팔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 이는 기존의 탈춤이나 판소리 또는 민요에 머물러있던 조선후기 커뮤니케이션 현상 연구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성과였다. 연구자가 향회(鄕會)와 민회(民會)로 요약되는 조선 후기의 새로운 역사적 현상에 주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 문제는 조금 더 구체화된다. 즉, 조선후기의 새로운 역사적 현상인 ‘공론장의 맹아’가 근대 신문의 생성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공론장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구성적 재결합’의 문제가 그것이다.

3. 조선후기 공론장의 맹아

1) 조선시대의 공론구조

조선후기 공론장의 맹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시대의 공론구조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선 건국 원년의 ‘태조실록’에서부터 공론은 ‘천하국가의 원기(元氣)’라 규정할 만큼, 공론의 이념은 언로(言路) 사상이나 간쟁(諫靜)의 정신과 더불어 조선조 통치체제를 밑받침한 이데올로기였다(최정호, 1986, 98쪽).

조선은 세계사적으로 어떤 나라보다 일찍 ‘공론’을 내세웠지만, 자급자족적인 농업을 중시하고 공업과 상업을 천시했기 때문에 ‘공론의 커뮤니케이션’이 지닌 한계는 뚜렷했다. 조선의 양반 계급이 백성을 위한다며 내세운

‘민본정치’ 또한 ‘군자는 생각이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君子 思不出其位 『論語』, 憲問 28)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심지어 조정의 언관까지 사림사회에 근거를 둔 여러 당파들의 당리당락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었다(김세은, 유교문화와 공론권, 122쪽). ‘양반’은 토지와 신분, 그리고 지식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커뮤니케이션 단위를 형성함으로써 기득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분제 지배층’으로 뿌리를 깊숙이 내려갔다(윤병철, 1993, 68쪽). 요컨대, 조선의 공론구조는 ‘사대부 계급만을 위한 공론권’으로 폐쇄적이고 중앙지향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최정호, 103쪽).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사회는 전환점을 맞는다. 앞서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간략히 기술했듯이, 농업에서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신분제 질서의 동요와 부의 축적에 따른 상업과 수공업, 광업의 활성화는 그에 걸맞은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 왕조 스스로 ‘변화’를 의식해 공론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박광용, 2001)을 보인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노론’ 일색의 ‘세도정치’가 들어선 19세기에 이르러 지배세력 내부의 공론구조는 과거보다 더욱 폐쇄적으로 변질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령 ‘여론’을 수렴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중세의 신분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들 사이에서 싹트는 새로운 움직임까지 담아낼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2) 문예적 공론장의 태동

조선시대의 폐쇄적 커뮤니케이션 체계에서 새로운 싹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역사학계에서 영·정조 시대라고 불리는 18세기로, 이때부터 조선사회는 대단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었다(이이화, 1994).

‘공론정치’를 표방한 조선사회에서 사람의 공론이나 지방의 공론(향중 공론) 형성의 기반 가운데 하나가 선비들에게 일반화해 있던 시 모임(詩社)이

나 강학(講學) 모임이었다. 18세기 전후시기가 되면 그 시 모임이나 강학 모임의 전통이 위항인(委巷人: 서리·중인·평민들)들에게까지 일반화해갔다. 이와 관련해, 『한국천주교회사』를 쓴 프랑스 신부 샤를 달레(Charles Dallet, 1874/1979, 서른)의 기록은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준다.

“방문, 야회, 초대, 그 밖의 보통 사교관계는 매우 잦고…… 사랑 즉 바깥방은 집 앞쪽에 있고 항상 아무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집주인은 평소에 거기서 거처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친구를 맞아서 잘 대접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 특히 여름에는 학자들끼리의 이런 모임이 조그마한 학회가 되어, 한 주일에 서너 번씩 모여서 문학비평 문제를 토론하고 유명한 저서의 뜻을 깊이 캐고 여러 가지 시작(詩作)을 비교한다. 평민은 평민대로 거리나 길가나 주막에 모인다.”

샤를 달레의 기록은, 당시의 ‘학회’나 ‘유명한 저서의 뜻’, 그리고 ‘문학 비평’이나 ‘시작’(詩作)이 유학의 특성상 정치 시국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랑방 공론’이나 ‘여항 공론’ 또는 평민의 ‘주막 공론’ 같은 여론 형성의 문화가 확산되어갔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료이다.

실제로 당시 사료에는 정치적으로 몰락한 사족 가문의 사랑채, 심지어 행랑채에서 인정을 받아 지방 수령 내지 학자로까지 지위가 상승했던 집사(執事)나 비부(婢夫)들의 기록도 나타난다(박광용, 2001). 대표적인 인물이 정여립 사건에 연루되었던 17세기의 정개청이다. 양반 지배층과 일반 백성을 연결하는 정치적·문화적 중간 공유 영역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 시기에 지방 향촌까지 서당 교육이 일반화하고 서적의 간행이 늘어난 사실은 평민의 의식 수준이 꾸준히 향상해갔음을 뜻한다.

조선후기의 이런 움직임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이 유럽의 18세기에 카페나 선술집에서 시작해 문예 공론장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²⁾과 비교해

2)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근대 유럽의 전개과정에서 이분화 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위치하는 영역으로 둘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아래 도표(하버마스, 1962, 98쪽)를 제시했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사적·이기적 인간들이 여론의 창출능력을 가진 공중으로 회집하는 커뮤니케이션 마당’이라면서 역사적으로 다

불 만한 대목이다. 유럽에서 그랬듯이 조선에서도 ‘문예 공론장’은 중세 질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17세기 이후에 사대부 중심의 문학이 위항문학, 평민문학, 여류문학으로 확대되어 간 것은 그만큼 학문적·교육적 교류(커뮤니케이션)가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상품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중세 신분제도가 와해되어가는 과정을 배경으로 김천택·김수장을 중심으로 한 시인 집단이 형성되고 그들에 의하여 서민계층의 문학이 사조적 경향을 이루며 발생·발전한 것이다(조선사회과학원, 1988, 451쪽). 양반문화의 평민화와 상호교류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원이다. 박지원의 『양반전』은 양반의 권리와 칭호가 매대되는 현실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며 “한갓 문벌을 재물로 하여 조상의 덕만 팔아먹는” 양반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조선사회과학원, 452쪽).

실학자들의 북학사상도 청나라 대중문화의 유행과 맞물리면서 중인, 서얼층을 비롯한 도시와 농촌의 중간계층으로까지 퍼져갔다. 이는 서얼통청운동(庶孽通淸運動)에서 볼 수 있듯이 19세기 정치상황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가운데 이루어낸 문화역량의 확장이었고 대중적인 지적 활동의 활성화였다.

중세 지배체제의 핵심인 신분제는, 이미 17세기에 허균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나오면서 지배세력 일각에 의해서도 정면으로 공격받기 시작했다. 『홍길동전』은 국왕의 명령보다 우위에 있는 주인공의 절대적인 능력을 그리는 등 중세의 한계를 넘나드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김창현,

양한 형태가 있다고 분석한다.

사적 부문		공권력의 영역
부르주아 사회 (상품교환과 사회적 노동의 영역) 해가죽의 내부공간 (부르주아 지식인)	정치적 공론장	국가
	문예적 공론장 (클럽, 신문) (문화적 재화시장) '도시'	(내부행정의 영역) 공정 (공정·귀족사교계)

2002, 82-83쪽). 구전설화를 밀절미로 18세기에 소설로 나온 『춘향전』은 이 몽룡의 시를 빌어 “금동이에 부은 맛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며 양반계급의 통치를 신랄하게 비판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19세기의 방랑 풍자시인 김삿갓도 부패하고 타락한 양반에 대한 증오와 풍자를 전국 곳곳에 ‘전파’하는 ‘커뮤니케이터’ 구실을 하였다.

이미 민간인이 판매목적으로 간행한 출판물인 방각본(坊刻本)은 17세기 이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함께 늘어나고 있었다. 영조 초기부터 방각본 출판이 활성화하면서 양반 신분의 선비는 물론이고 사대부의 규수·중인·서출·서리 등이 독자층으로 떠올랐고, 19세기에 이르면 사대부 가문의 부녀자 뿐만 아니라 평민에게까지 독자층이 퍼져갔다(부길만, 2003, 34-37쪽).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9세기엔 소설뿐 아니라 잡기(雜記), 만설(漫說), 가사문학, 시조문학(특히 사설시조),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들이 ‘총서’로 묶여 나왔다. 풍자와 해학을 통해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들어있는 작품들이 당시 정치적·사회적 상황들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김창현, 2002, 99-102쪽).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가 시작된 사회의 산물인 소설이 유럽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창작되었고, 특히 동아시아에선 그 전환의 양상이 조선에서 또렷했다는 국문학계의 최근 연구성과(조동일, 2002, 337쪽, 350쪽)는 문예 공론장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뒷받침해준다.

문제는 유럽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어가던 문예 공론장이 조선에서 정치적 공론장으로 발전하는 길이 달랐다는 데 있다.

3) 정치적 공론장의 맹아

문예적 공론장을 바탕으로 확산되어가던 신분제에 대한 비판의식은 19세기에 들어와서 한 차원 높은 운동으로 전개될 조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선 중세사회의 정치질서에 정면 도전하며 올라온 ‘민란’이 그것이다. 민

란의 중심에 향회(鄉會)가 있었다는 역사학계의 연구성과(안병욱, 2000)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영·정조 시대의 새로운 움직임은, 정조 사후 ‘세도정치’가 형성됨에 따라 여론수렴 과정이 닫히면서 19세기에 연이은 농민봉기로 표면화했다. 19세기를 ‘민란의 세기’라고 평할 만큼 1812년에는 평안도에서 홍경래란이, 1862년에는 충청·영남·호남에의 70여 개 군에서 민란이, 그리고 1894년에는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났다. 역사적인 세 사건들 사이에도 크고 작은 농민봉기가 줄기차게 일어났다. 지배세력은 공론구조를 폐쇄적으로 닫은 그만큼 사회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 결과 ‘세도 정권’ 아래 조세와 부역체계는 크게 문란해졌다. 이에 따라 백성은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내기 위해 향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백성들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취를 당할 때, 처음에는 수령을 찾아가서 호소하기도 하고 집단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그 호소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소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론의 마당’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향회였다.

향회는 본디 향촌의 교화(教化)나, 수령의 보조기구, 그리고 이를 전제로 수령(守令)이나 이서(吏胥)들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기능을 가졌으며 지배기구의 일부였다. 18세기 중엽까지도 대체로 불평등한 신분제 속에서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열리는 것들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조세정책과 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향촌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18세기에 중엽에 이르러 향회의 성격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규적인 조세에 더해 각 지방에서 편의적으로 부과하는 여러 명목의 수취가 행해졌는데,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라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때 수령은 기왕의 향회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의견을 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민의(民意)를 수렴했다.

가령 1745년(영조 21년) 고양군(高陽郡)의 군수는 이대정(里代定)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리마다 대소민인(大小民人)의 여론을 조사해 그 동의를 얻었고, ‘결액’이 생길 때는 상하노소(上下老少)가 모두 모여 공론(公論)

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高陽文牒, 1745, 안병욱, 2000). 비록 제한적인 범위였지만 자치적으로 논의해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모든 것을 수령 일변도로 통제, 시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읍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중시하고 자치적 운영을 유도하는 경향은 18세기 후반의 대표적 실학자 안정복(1777)이 한 고을을 다스리며 남긴 기록에서 좀더 확연해지고 있다. 그는 관 일변도의 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민의 자치로 해결하려고 했다. 읍의 사정에 밝은 향소(鄕所)에서 폐정(弊政)을 보고하게 했고, 장시(場市)에 직접 여론 수집함을 설치하여 백성들이 감히 말하기 어려운 관의 폐단까지 조사하려 했다. 중요한 일일수록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여론에 따라 실행하려 했다. 만일 민심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강제로 실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此等大事不可昧然行之 故先爲告示惟爾民人等 相與商確便與不便各爲論報 若民心不顧則亦不强令爲之 此意知委坊曲大小民人等處 無有一民不知之弊, 안정복, 1777, ‘棚設防役所傳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분을 넘어선 공론장의 맹아를 발견하게 된다. 신분적인 구별이 없이 ‘大小民人(대소민인)’ 모두의 의견을 묻는 ‘마당’이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비록 한계는 있었어도 양반과 평민이 함께 ‘자치’에 참여한 것은 신분제에 바탕을 둔 중세체제와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실제로 농업 생산력과 상업의 발달로 기존의 신분체제는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백성 가운데 일부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했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적인 지위 상승을 이루기도 했다. 반면에 기존의 양반들 가운데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기층사회의 경제관계와 신분제의 내적인 구조에 큰 변동이 나타났다.

이런 향촌사회의 변화 흐름에서 가장 주목할 세력이 당시 사료에 ‘요호(饒戶)’로 기록된 사람들이다(안병욱, 2000). 요호는 한자 말 뜻 그대로 농촌사회의 변화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부를 축적한 층과, 농업 생산력의 향상이나 변화에 수반되는 상업의 발달로 성장한 상인층, 그리고 중세적인 통제

체제가 혼란한 틈에 적절히 편승하여 부를 축적한 향리(鄕吏) 등의 하급관리들, 기타 특수한 직역(職役)들로 이루어졌다.

요호들은 일반적으로 중세체제에 편승함으로써 신분을 상승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더러는 수령을 비롯한 지배층에 편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사회적 지위의 성장을 추구하던 요호들이 19세기에 들어와 세도정치의 폐쇄적인 공문구조에 근본적인 한계를 느끼면서부터, 향회는 그들 상호간에 집약된 여론을 바탕으로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무대, 곧 ‘새로운 활동의 장(場)’이 되었다.

삼남지역 곳곳에서 향회가 민회(民會)로 불려지고³⁾ 민란으로 전환한 것은 여러 사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향회는 거사 뒤에도 중요했다. 관권을 배척하거나 상대적으로 약화시킨 뒤의 공백을 민인(民人)들의 주체적 의지로 활용해나갔으며 이런 과정에서 향회는 새로운 면모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주동적으로 나선 요호의 역사적 의미는 유럽에서 중세사회를 해체시킨 시민계급과 비교해 맹아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기층사회와 지배층 사이에 연로가 막히고 분단된 상황에서 요호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의 요구는 갈수록 참여화했다. 향회와 민회가 그 요구를 수렴하면서 백성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사 변동의 원천이 될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정치적 공문장’으로 발전한 것이다.

4. 근대 신문의 생성과 특성

1) 개항과 근대신문 창간

사랑방공론이나 주막 공론, 여항(閭巷)공론에 이어 문학과 사상에서 새로운 흐름이 문예적 공문장을 형성해가고, 마침내 향회라는 정치적 공문장이

3) 가령 1893년 동학의 보은집회에 참석한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집회를 열러 다른 나라에서 정채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바와 같은 ‘민회’라고 불렀다(안병욱, 2000).

민란이라는 정치투쟁의 마당으로 전개되어 갔지만, 그 과정에 인쇄매체로서 신문을 낳지는 못했다.

앞서 분석했듯이 근대문학으로서 소설이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그 방각본의 인쇄 출판도 활발해갔던 사실을 주목한다면, 시기의 문제일 뿐 조선 스스로 신문이나 다른 형태의 인쇄 공론장을 창안했을 가능성은 높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사의 맥락 속에는 근대적 커뮤니케이션에 로 발전해나갈 요소(말하자면 준비)가 거의 없었다”는 종래의 ‘이식론’(임근수, 1975)은 사실과 맞지 않는 정체성론에 근거한 주장이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분명한 것은 ‘문예 공론장’에서 아직 신문을 만들어 내지 못한 상태로 ‘개항’이 이루어지고 자본주의 열강의 근대 문명과 마주 친 사실이다. 게다가 당시 조선의 지배세력은 서학(西學)과 서교(西敎: 기독교)를 구분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배격하는 폐쇄적 공론구조를 유지해온 상황(강재인, 1996/1998, 252쪽)이었기에, 일본의 ‘무력 시위’로 열린 강제적 개항을 맞아 국가적 위기를 해소해나갈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다.

바로 그 개항 공간에서 비로소 조선 최초의 근대신문이 ‘생성’되었다. 1883년 10월 1일(양력 10월 31일), 서울에서 창간된 《한성순보》가 그것이다.

조선에서 《한성순보》 창간을 주도한 것은 지배세력 내부의 젊은 지식인들인 개화파, 그 가운데서도 박영효와 유길준이었다. 철종의 사위인 박영효는 1882년 일본에 수신사로 건너갔을 때, 일본의 ‘최고 계몽사상가’로 평가받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를 만난다. 후쿠자와와는 ‘게이오 대학(慶應大學)’의 창립자일 뿐만 아니라 《시사신보(時事新報)》를 창간한 인물로서, 1만엔 지폐에 초상화가 실려 있을 만큼 현대 일본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미국의 문명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일본 ‘근대화’에 앞장선 후쿠자와와는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새로운 발걸음에 매혹된 ‘조선 젊은이들의 스승’으로 나타났다(Bruce Cumings, 1997/2001, 158쪽). 박영효에게 조선의 문명 개화를 위해서는 신문의 발행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신문발행을 돕겠다고

나선 인물도 바로 후쿠자와였다.

후쿠자와는 일본에 온 조선의 ‘명문가 젊은이’들을 포섭하는 데 집요했다. 박영효보다 앞서 1881년 5월 초에 ‘신사유람단’의 어윤중 수행원으로 일본에 온 유길준을 그 해 6월 8일 자신이 세운 게이오 대학에 입학시켰다.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인 유길준이 다섯 달 가까이 후쿠자와의 집에 머문 사실은 유념할 대목이다(김영희, 1994, 114쪽). 유길준은 그곳에서 후쿠자와가 《시사신보》를 창간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후쿠자와는 박영효의 귀국 길에 자신의 제자인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1860-1938)를 비롯한 편집 기술자와 인쇄공 7명을 동행하게 했다. 조선에 돌아온 직후 박영효와 유길준은 후쿠자와가 기대했던 대로 조선 정계의 실력자로 떠오른다. 특히 박영효는 1883년 1월 7일 한성부 판윤으로 취임하면서 고종에게 신문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고, 마침내 고종은 같은 해 2월 28일 한성부가 신문 발간을 맡으라는 명을 내렸다.

물론, 박영효의 과감한 행보에 “민씨측에서 어떤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껴”(이광린, 1979, 67쪽) 4월에 한성부 판윤은 바뀐다. 박영효가 광주유수(廣州留守)로 좌천되고 유길준도 사임하면서 귀국할 때 함께 온 일본인들도 대다수 돌아갔다. 이에 따라 신문 창간사업의 주도권이 한성부에서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옮겨지고 그 산하기구로 박문국이 설치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문발행에 일본의 영향력이 배제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조선을 ‘전학’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본인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 체류하던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박문국의 번역관과 《한성순보》의 편집고문으로 정식 ‘고용’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오랜 공론정치 구조에 새로운 획을 긋는, 첫 근대 미디어의 탄생에 일본의 제국주의적 영향력이 짙게 드리운 것이다.

2) 근대 신문 생성의 특성

근대 신문 발행의 주체가 일본에 다녀왔고 그곳에서 일본인으로부터 신문 발행을 적극 권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다면, 그것은 균형을 잃은 분석임에 틀림없다. 개화파가 독자적으로 신문을 발행할 계획을 지니고 있던 터에, 일본의 권유가 있었다는 분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항(1876)을 전후해 중국과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은 ‘견문기’에서 신문이 개화에 긴요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1873년과 74년 두 차례에 걸쳐 동지사절(冬至使節)의 일원으로 베이징을 다녀온 강위와 수신사로 1876년 일본에 다녀온 김기수, 그리고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1881년 일본을 다녀온 엄세영은 견문기나 보고서에서 서양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신문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렸다(정진석, 2001, 17쪽).

이는 조선의 지배세력 내부에서 신문 발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후쿠자와와 이노우에의 영향력을 과대 평가할 필요 없이 독자적인 발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차배근, 1996).

하지만 이런 분석은 일본의 영향력과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첫째, 개화파에게 신문 발행을 권유한 일본인이 한낱 평범한 지식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메이지유신 시기 일본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그’였다. 일본 역사학계가 ‘최고의 계몽사상가’로 평가하지만, 조선에 관한 한 그는 전혀 계몽주의자가 아니었다. 그가 박영효나 유길준에게 접근해 귀국하면 신문을 만들라고 권한 진정한 의도는 결코 조선의 ‘계몽’에 있지 않았다. 조선의 개화파와 연계를 통해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였다.

후쿠자와는 “같은 문자를 쓰고 인종이 같은 아시아 민족이 일본을 맹주로 대동 단결하여 서구 열강을 아시아에서 물리쳐 부흥시키자”는 흥아론(興亞

論)에 대해 “값싼 인종주의나 동정주의에 연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인물이다. 그는 “서구 열강의 문명 제국과 벗어나 일본을 문명화하고 서구 열강의 방식에 따라 아시아를 침략하자”는 탈아론(脫亞論)을 처음 제기했다(강준만, 2001, 35쪽).

일본에 기운 개화파가 주도한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고 《한성순보》가 불타버린 뒤 후쿠자와는 자신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진부의 잠정적인 일조제휴론(日朝提携論)을 접고, 이전의 국권 확장론과 아시아 진출론에 침략성을 더하면서 조선 지배와 대청전쟁(對淸戰爭)에 대비한 군비 확장을 격렬하게 주장한다. 그의 『탈아론』(1885년 3월 16일)은 제휴론의 포기 선언이자 중국과의 경쟁에서 일시적 패배 선언임과 동시에 장래의 ‘조선 지배’와 대청 승전을 맹세하는 구미 중심적 문명 개화의 선언이었다(김봉진, 2001, 167쪽).

심지어 후쿠자와는 「조선인민을 위하여 조선의 멸망을 축하한다」(1885)는 글까지 발표해 조선 침략론을 전개했다(강창일, 1999, 127-128쪽). 따라서 박영효에게 신문 발간을 권했던 1882년, 후쿠자와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굳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 후쿠자와는 박영효에게 단순히 신문 발간을 권유한 게 아니라 귀국 길에 그의 제자들을 함께 보내 신문 발행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 인물인 이노우에는 박영효와 유길준의 도움으로 조선의 정계에서 곧 주요 인물이 된다. 이노우에가 당시를 회고하며 남긴 글(井上角五郎, 1891/1995, 33쪽)을 보자.

“나는 조선 조야의 많은 사람들과 광범위하게 교제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깊은 내외의 사정을 탐색할 수 있었다. …… 외아문(外衙門)에 적절히 관여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정부의 고문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써 그동안 애쓰고 희망해온 것을 이루기 위한 서막을 열게 되었다.”

이노우에는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해 “조야의 많은 사람들과 광범위하게 교제”하면서 무엇을 노렸을까. 왕궁 안에서 ‘지위’를 차지한 그가 “이로써 그동안 애쓰고 희망해온 것을 이루기 위한 서막을 열게 되었다”고 회상한 것은 유념할 대목이다.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노우에는 ‘서막’의 정체를 밝힌다.

“1883년 11월 《한성순보》 제1호를 발행했다. 나는 외아문에 관여하면서 신문의 경영과 기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가 거처하는 곳을 사무실로 정하고 박문국(博文局)이라고 불렀다. 외아문에 있는 민영목과 김윤식을 당상(堂上)으로 하고, 해외사정에 밝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주사(主事) 및 사사(司事)로 임명하였으며, 나는 이를 관장하는 주임(主任)이 되었다. 매월 3회 발간한 이 신문은 정부의 소식과 해외의 사정을 게재하여 부(府), 현(縣), 주(州), 군(郡), 진(鎭) 및 만호(萬戶)에 배포했다. 이것이 바로 조선에서 신문의 시작이었다”(井上角五郎, 1891, 34쪽).

물론, 이노우에의 회고에는 ‘자기 과시’가 담겼으리라는 점을 감안해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후쿠자와가 이노우에를 조선으로 떠나보내며 한 ‘지시’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후쿠자와는 이노우에를 불러 “군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받으며 자신의 속내를 확연히 드러냈다(井上角五郎, 1891, 5~6쪽).

“나는 조선이 완전히 독립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미루어볼 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 이외의 어떤 나라도 조선에 손을 뻗치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조선을 계도하는 것은 오직 일본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이다.”

조선에 신문을 만들기 위해 떠나보내는 제자에게 “조선을 계도하는 것은 오직 일본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라고 다짐을 받는 것은 허투루 여길 대목이 결코 아니다.

물론, 《한성순보》가 일본의 영향 아래 놓여있었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친일신문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다. 《한성순보》 제1호로부터 30호까지에 나타난 ‘각국근사란(各國近事欄)’의 뉴스원으로 인용된 각국 신문의 빈도 수를 살펴보면, 중국(청나라)이 일본에 비해 압도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⁴⁾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당시 번역책임자로서 편집고문이 이노우에였고, 그가 신문에 어떤 기사를 번역해 실을지 판단하는 ‘편집자’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중국의 신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상당수가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열강의 선교사나 상인들이 발간한 신문들이었다.

게다가 중국은 외국 정세에 대한 기사가 일본에 우호적이라고 해서 신문사를 습격까지 했으며, 조선의 백성도 이노우에가 편집고문으로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에 편향적 기사를 쓴다고 인식해 비판적이었다(안종묵, 2003, 24쪽).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화병(華兵)’의 범죄기사를 계기로, 중국의 공식 항의를 받고 결국 이노우에가 편집고문직에서 물러난 사실도 그의 위상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역설적으로 ‘입증’해준다.

유념할 대목은 《한성순보》가 ‘서세동점(西勢東漸)’, 곧 서양 세력의 동양 진출을 맞아 한·중·일 동양 3국의 공존공영을 강조하며 이들 국가들과 돈독한 외교의 필요성을 개진한 사실이다.

“먼 것을 사귀는 것은 가까운 것을 사귀는 것만 못하고 가까운 것을 사귀는

4) 청나라 신문 인용이 신보(申報, 上海申報 포함) 244건을 비롯해, 상해신보(上海新報, 上海新聞, 上海報 등) 36, 자림호보(字林彙報) 100, 순환일보(循環日報) 60, 중외신보(中外新報) 59, 향화화자보(香港華字報, 香港報 포함) 22, 문회보(文匯報) 2, 그리고 복주일보(福州日報), 하문서자보(廈門西字報) 1 기타 40등, 모두 568건으로 전체의 80.11%를 차지했다. 다음은 일본 신문으로 시사신보(時事新報) 13, 우편보지신문(郵便報知新聞) 6, 일본신문(日本新聞) 5, 동경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 4, 일본보(日本報)(日本新報 포함) 15, 기타 4등 합계 47건으로 6.63%이다. 3위는 영국(17건)으로 2.40%이다. 그리고 인도 7건, 독일 6건, 프랑스 5건, 미국 4건, 러시아(俄國) 3건, 서자지(西字紙)라 하여 13건, 기타 39건 등이었다(최준, 1976, 38~39쪽).

것은 이웃을 사귀는 것만 못하다. 이는 저것이 어리석고 이것이 지혜롭기 때문은 아니다. 대체로 이것을 사귀는 것이 본(本)이고 저것을 사귀는 것은 말(末)이니 본(本)이란 정이 친밀하여 사랑이 깊고 (末)이란 정이 소원하여 사랑이 얕다. 사랑이 얕은 자는 염려도 단순하고 사랑이 깊은 자는 염려도 자상한 것이 이치이고 또한 형세이다”(《한성순보》 1884년 7월 3일자).

이 기사가 담고 있는 인교론(隣交論)은 당시 일본의 조선 침략 의도가 뚜렷했던 점에 비추어 우려할 만한 논조가 아닐 수 없다. 일본에 대한 경계의식을 허물고 ‘사랑’과 ‘자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화파의 기본 인식이기도 한 동양 3국 공영론은 《한성주보》로 이어지고 그 뒤 《독립신문》에 이르러 “일본 맹주론”(김민환, 1995, 404쪽)으로 ‘발전’함으로써 한 시대를 오도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한성순보》에서 《독립신문》에 이르는 근대 신문들이 ‘동양 3국 공영론’에 매몰되어 민중을 계몽의 대상으로만 본 것도 한국 언론이 밖으로부터 틀 지워진 한계에 서 비롯된다.

향회가 민회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갑오농민전쟁 시기에 집강소라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결실을 맺었음에도, 개화파와 그들의 대변지였던 근대 신문들은 아래로부터 민중의 요구를 시종일관 적대시하거나 외면했다. 결국 한국의 근대공론장은 밖으로부터 형성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민중 요구를 배제해 공론장 자체의 결정적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5. ‘갈등구조론’의 논리

지금까지 분석했듯이, 조선사회 내부에서 움튼 공론장의 맹아가 자라나 근대 공론장을 형성하기 전에 자본주의 열강과 부딪쳤고, 그 결과 한국 공론장은 자주적 발전의 길을 걷지 못했다.

근대언론의 생성문제를 두고 그동안 언론학계에서는 이식론(移植論, a

transplantation theory)과 접목잡종론(接木雜種論, a graft hybrid hypothesis)이 대립되어왔다. 학계의 논의를 외인론(外因論)과 내인론(內因論) 그리고 내외인합작론(內外因合作論)으로 나누는 분류(안종묵, 19쪽)도 있지만, 근거가 빈약한 내인론을 제외한다면, 이식론과 접목잡종론은 외인론과 내외인합작론의 구분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식론을 집약한 임근수(1975, 127쪽)는 “서구의 근대 신문은 어떠한 시원으로부터 출발해서 봉건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형성되어진 뒤에 다시 자연발생적으로 근대사회의 근대 신문으로 발전·성립되어진 것인 데 반하여, 비서구사회의 근대 신문은 그 전반적 근대화 과정에서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인공적 또는 타율적 노력에 의하여 비자연발생적으로 부식되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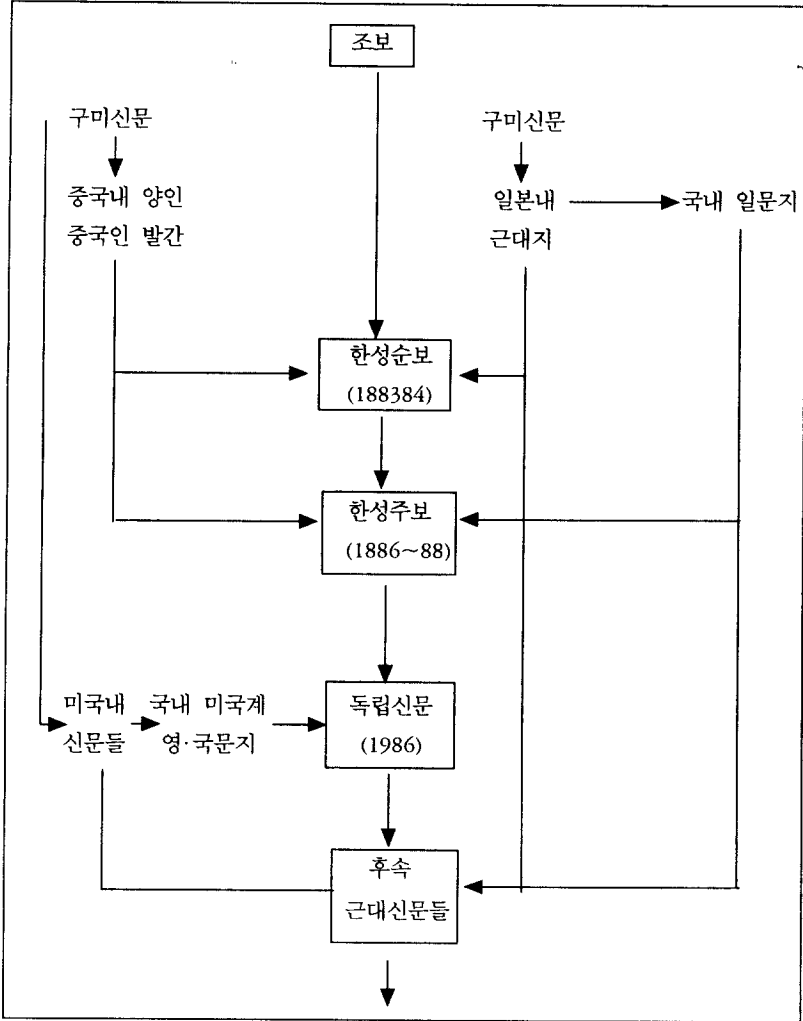
따라서 그는 서구 근대 신문의 생성과정을 ‘자연발생적 시원설’로 이해하고, 한국을 비롯한 모든 비서구사회의 그것은 ‘묘목의 이식(移植)·착근(着根)·배양(培養)·생장(生長)’으로 공식화한 ‘비자연발생적 이식설’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배근(1996, 5-33쪽)은 “한국 언론사학계에서 가장 일반화된 이식설”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견해를 ‘접목잡종설’로 명명했다. 그는 근대언론의 생성과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료를 찾아보면 이식설에 상반된 것들이 적지 않다면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차배근, 30쪽).

“이식설처럼 서구사회의 근대적 언론문물을 받아들여 생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그대로 이식해서 부식시킨 것은 아니며, 그것을 능동적이고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우리의 전통적 신문현상에 접목시켜 우리 나름대로 한국화해서 일본이나 중국 또는 미국의 근대신문들과는 그 특성이 다른 독특한 한국적 신문으로 생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차배근이 자신의 논리를 도식으로 설명한 <그림 1>을 보면, ‘한국의 전통적 신문현상’으로 《조보》를 들고 그것에 ‘외래의 근대 신문 문물’이라

<그림 1> 한국 근대 신문의 생성과정과 그 집목관계



출처: “한국 근대신문의 생성과정과 독립신문”, 차배근, 1996, 『언론과 사회』 14권, 31 쪽.

는 ‘접’을 붙임으로써 근대 신문이 생성되었다는 접목잡종론의 논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차배근의 연구는 임근수의 이식설에 내포된 ‘한국사 정체성론’을 벗어나, 한국 내부의 연속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근대 신문의 현상을 중세 시대의 《조보》와 “접목시킴으로써 우리 근대 신문은 서양의 근대 신문과 우리의 전통적 신문 현상의 중간의 형질을 지니게 된 잡종”(차배근, 30쪽)이라는 분석에서 멈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접목잡종론은 《조보》와 ‘접목’된 신문이 근대 시민사회의 바탕인 공론장과 빛을 수밖에 없는 갈등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식론과 접목잡종론은 역사현상에 대해 제도적 변화에만 연구를 한정함으로써 현상이 지닌 사회구조적 변화를 간과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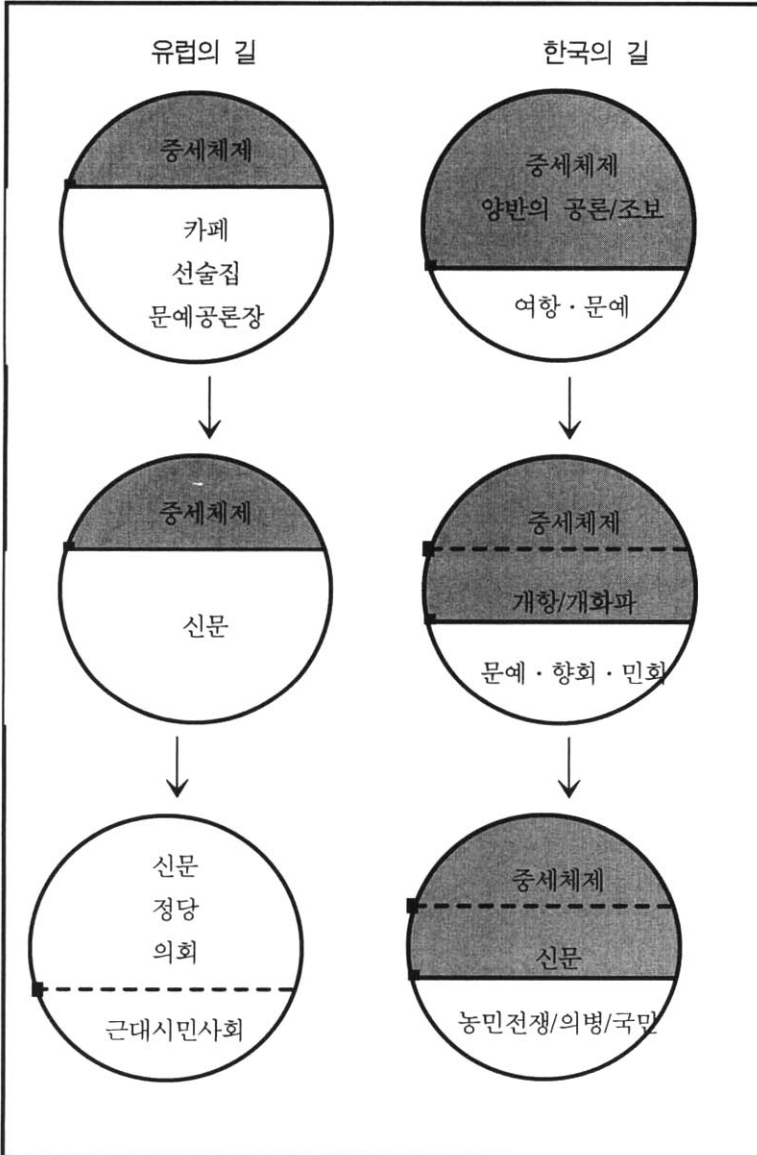
언론현상을 학제적으로 접근한 본 연구에서는 이식론과 접목잡종론을 지양해 근대 공론장의 생성을 내재적 발전론의 연장선에서 ‘갈등구조론’으로 파악했다. 본 논문이 지금까지 분석한 한국에서의 공론장과 근대 신문의 생성과정을 ‘발생적 구조주의(genetic structuralism)’에 따라 구조의 전체성(wholeness)을 부각해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 공론장 생성은 유럽과 다른 길을 걸었다. 유럽에서 공론장은 카페와 선술집에서 시작해 문예 공론장을 거쳐 신문을 통해 중세 신분제 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근대 민주사회를 여는 데 핵심적 구실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공론장의 출범은 전혀 달랐다. 조선 사회 내부에서 싹트고 있던 주막과 여항의 공론이 문예 공론장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향회와 민회의 정치적 공론장으로 전개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신문을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신문은 중세체제의 내부에서 지배세력의 한 당파인 ‘개화파’의 필요성과 외세의 의도가 맞아떨어져 창간됨으로써, 아래로부터 형성된 유럽의 공론장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서양의 신문 개념을 조선에 처음 소개하고 신문 창간에 깊이 관여한

<그림 2> 유럽과 한국의 공론장 생성 비교



유길준의 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유길준(1895/1973, 294쪽)은 “신문사의 역할이 국가를 위하여서는 간관(諫官)의 직책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향하여서는 사필(史筆)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중세시대의 사관이나 간관의 연장선에서 근대 신문을 바라보고 있다. 그 결과 “만약 신문사가…… 망령되게 국가의 법령을 논란하고 사람들의 언행을 비판하여 실상이 없는 행위를 할 것 같으면, 정부가 내리는 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나라를 존중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데에 간무한 정성을 다하는 글은 세상 사람들의 충성심을 고무시키게 된다”고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국민’에 대한 인식은 전혀 다르다. 유길준(1895/1973, 109쪽)은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관심을 널리 진작하여 야비하고 비루한 습속이라든가 더럽고 지저분한 습관이라든가 속이거나 거짓된 행실이라든가 불공평한 조치 등등을 대중을 상대로 여론화하여 논박하여 논박하며 또는 신문지상에 열거함으로써 지탄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논박과 지탄을 꺼리게”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지식이 부족한 나라인 경우, 갑작스럽게 그 나라 국민들에게 국정참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125쪽)고 못박았다.

결국 신문과 관련해서 ‘국민’을 계몽이나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박영효·유길준을 비롯한 개화파는 아래로부터 형성되고 있었던 공론장과 중세사회의 변혁 열망을 적대시하게 된다.

신문이 근대 시민사회를 열어나가는 데 공론을 모아간 ‘유럽의 길’과 달리 아래로부터의 공론화 요구와 갈등 구조를 이룬 것이 ‘한국의 길’이었다. 한국 저널리즘이 ‘발생’할 때, 아래로부터 올라온 시민들을 위한 공론장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백성이나 의병들의 요구를 적대시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6. 연구 의미와 남은 과제

지금까지 하버마스가 제기한 공론장이 조선 후기에 맹아적 형태로 싹트고 있었음을 규명하고, 이어 개항 뒤 일본을 통해 근대 대중매체가 들어오면서 공론장이 형성되는 과정과 구조를 학제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했다.

한국 공론장과 근대 신문의 생성과정을 이 논문에서 제안한 ‘갈등구조론’으로 분석할 때, 이식론이나 접목잡종론, 또는 외인론이나 내외인합작론으로 파악할 수 없는 역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비록 개화파들이 한국 근대 신문의 형성에 주체가 되었지만(채백, 2003, 17쪽), 개화파가 지닌 한계로 말미암아 결국 한국 공론장은 밖으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틀지워짐으로써 유럽의 길과 달리 아래로부터의 공론을 배제했음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개화파의 신문 주도는 《한성순보》에 머물지 않고 이노우에가 다시 관여한 《한성주보》는 물론이고, 《독립신문》으로 계속 이어진다.

둘째, 한국 근대 공론장이 지닌 갈등의 역동적(dynamic)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물론,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란 개념 자체가 그 안에 갈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그림 2>에서 보았듯이 한국에서 공론장은 갈등의 표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밖과 위로부터 제한된 특성을 지닌다. 그 결과 언론이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갈등들을 소통시킴으로써 풀어가기보다는, 자유롭게 평등한 구성원들에 의한 공론장의 성숙을 가로막게 되어 지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셋째, 갈등 구조론은 근대 미디어를 형성한 주체들이 신문을 단순히 이식했던 아니면 능동적으로 추진했든, 조선 후기사회에서 싹튼 아래로부터의 공론장 맹아와 무관하거나 그것을 적대시한 사실을 중요하게 인식함으로써 공론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연구 문제로 제기해준다.

넷째, 기존의 자본주의 맹아론이 ‘생산력의 변화’라는 토대만을 중심에 놓고 연구되어온 점에 비추어 근대 공론장의 갈등구조 인식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의사소통과 토론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

존의 생산력을 증시한 ‘내재적 발전론’을 보완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학제적 연구의 성과는 언론학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맹아론’ 논쟁이 다시 일고 있는 역사학계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남겨진 연구과제는 근대 공론장이 생성될 때의 구조적 특성들이 《한성순보》 이후 한국 언론사의 전개과정에서 어떻게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치밀한 천착이다. 더 나아가 그 구조적 특성들이 언론사의 전개과정에서 얼마나 극복되었는지 그리고 온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사회에서 근대는 여전히 성취되어야 할 그 무엇이며 동시에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세계 전체가 파국을 면치 못할 그 무엇”(최원식, 2001, 59쪽)이기 때문이다.

공론장 자체가 유럽과 미국에서도 ‘재봉건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화에 맞부딪친 상황에서 한국 공론장의 재구성은 근대의 완수와 동시에 탈근대라는 이중적 과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만길 (2000).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울: 창작과 비평사.
- 강준만 (2000). 『권력변환: 한국언론117년사』.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강창일 (1999). 일본인 망언의 뿌리. 한국역사연구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3』. 서울: 역사비평사.
- 구선희 (1994). 해방 후 남한의 한국사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사의 이론과 방법1』. 서울: 한길사.
- 김민환 (1995). 『개화기 민족지의 사회사상』. 서울: 나남.
- 김봉진 (2001). 개화기 신문과 일본-후쿠자와 유키치를 중심으로. 위암 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 『한국근대언론의 재조명』.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세은 (2001). 유교문화와 공론권, 『언론과 사회』, 9권 4호, 96~129쪽.
- 김영희 (1994). 생성기 한국 근대언론사상의 형성. 『언론학보』(한양대언론

문화연구소), 14집.

- 김용섭 (1970/2004). 『한국근대농업사연구1』. 서울: 지식산업사.
- 김창현 (2002). 『한일소설형성사』. 서울: 책세상.
- 박광용 (2001). 17·18세기 조선의 국가와 ‘公論’. 제44회 전국 역사학대회 발표문.
- 방정배 (1995). 『커뮤니케이션 변혁/사상/이론』.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 부길만 (2003).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 연구』. 서울: 서울출판미디어.
- 안병옥 (2000). 『19세기 鄕會와 民亂』.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병옥 (1986). 19세기 壬戌民亂에 있어서의 ‘鄕會’와 ‘饑戶’. 『韓國史論』, 14집.
- 안병옥 (1986). 朝鮮後期 自治와 抵抗組織으로서의 鄕會. 『聖心女大論文集』, 18집.
- 안정복 (1977). 木州政事 『順菴集』권16. 서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 안종묵 (2003). 『한국저널리즘의 출현과 사상운동』. 서울: 가은.
- 유길준 (1895). 『西遊見聞』. 채훈 옮김(1973). 서울: 대양서적.
- 윤병철 (1993). 17-18세기 조선조사회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분화과정. 한국언론학회(편), 『한국적 커뮤니케이션모델의 탐구 1』.
- 윤영대 (2004). 미디어사회의 언론현상과 이념. 한국언론재단/한국기자협회 주최 제36회 기자포럼 발제문(2004년 4월 6일).
- 이광린 (1979). 『한국개회사연구』. 서울: 일조각.
- 이이화 (1994). 『조선후기의 정치사상과 사회변동』. 서울: 한길사.
- 이재경 (2004). 한국 저널리즘의 3가지 위기, 월간 『신문과방송』 40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문(2004년 3월18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임근수 (1975). 한국커뮤니케이션사 연구의 방법에 관한 일고찰. 『신문연구』, 16권 1호.
- 임근수 (1976). 개항백년의 한국언론. 『신동아』, 통권 143호, 174~188.
- 정진석 외 (2001). 『우리신문100년』. 서울: 현암사.
- 조동일 (2002). 『세계문학사의 전개』. 서울: 지식산업사.
- 조선사회과학연구원 (1988). 『조선문화사』. 서울: 미래사(평양 출판 영인본).
- 차배근 (1996). 한국 근대신문의 생성과정과 독립신문—이식설에 관한 몇가

- 지 의문점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4호, 5~33.
- 채백 (2003). 『신문』. 서울: 대원사.
- 최원식 (2001). 『문학의 귀환』.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최정호 (1986). 조선조 공론권의 구조변동에 관한 시론. 『사회과학논집』, 17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95-106쪽.
- 최준 (1976). 『한국신문사론고』. 서울: 일조각.
- 姜在彦 (1996). 西洋·朝鮮. 이규수 옮김 (1998). 『서양과 조선』. 서울: 학고재.
- 井上角五郎 (1891). 漢城之殘夢, 한상일 옮김(1995). 『서울에 남겨둔 꿈: 19세기 말 일본인이 본 조선』. 서울: 건국대출판부.
- Cumings, Bruce (1997). *Korea's Place in the Sun : A Modern History*. 김동노 옮김 (2001).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 Dallet, Charles (1874). *Histoire de l'Eglise de Coree*. 최석우 옮김 (1979). 『한국천주교회사(상)』. 서울: 분도출판사.
- Habermas, Jurgen (1962). *Der Strukturwandel der Offentlichkeit*. 한승완 옮김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서울: 나남.
- Piaget, Jean (1973). *Main Trendes in Interdisciplinary Research*. 오세철 옮김 (1980). 『현대학문체계와 그 엇물림』. 서울: 연세대출판부.

(최초 투고 2004.06.01., 최종원고 제출 2004.10.11)

The Conflict-Structure of Public Sphere in Korea Focusing on Formation of Modern Media

Seok-Choon Shon

guest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Jung-ang University)

This study tries 'interdisciplinary research' regarding the formation process of public sphere and the modern media on the Korean society. From the process where the civil society of modern ages is formed, the public sphere was condition that pulls down the feudal system of medieval Europe and appears the civil society. The modern newspaper collected the public opinion from lower part and did play a leading role which forms public sphere in Europe. Even from Korea the literary public sphere and political public sphere were developing inside the Chosun Dynasty period from lower part since 18th century. However the opening of a port became accomplished before making the printing media which is newspaper. As a result the public sphere in Korea was accomplished a conflict-structure. This study cleared where the crisis of Korean journalism is originated by presenting a conflict-structure differently with a transplantation theory or a graft hybrid hypothesis.

Keywords: public sphere, civil society, a transplantation theory, a graft hybrid hypothesis, genetic structuralism.